

## 복지재정지출의 합리적 이해: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과 비교하여

최근 언론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의 평균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19%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중은 국내총생산(GDP)의 9% 정도로 무려 10%포인트나 낮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보험 관련지출이 정부 재정 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복지재정통계가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크게 감소할 수 있다. 더욱이 공적연금의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자연스럽게 OECD 국가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복지재정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의 평균 복지재정 비중에 비해 약 10% 정도 낮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, 이는 실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함.

-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6%로 OECD 국가 평균 6.4%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임.<sup>1)</sup>
  -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2006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.
  - 국민연금 급여 소득대체율 기준은 4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금제도가 성숙될수록 실제 수급자 일인당 급여지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임.
  -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11년 현재 약 2백5십만명으로<sup>2)</sup>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2030년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<sup>3)</sup>

1) 국민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령연금(Old-Age)을 기준으로 함. OECD Statextract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통계 2007년 기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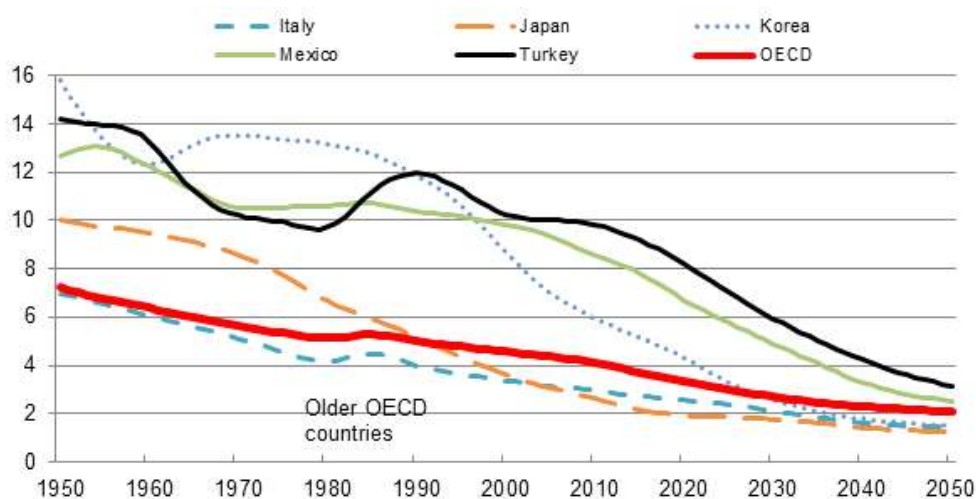
2) 2011년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임.

3) 203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10년 11.0%에서 2030년 24.3%로 예측됨(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).

- 건강보험과 노인장기보험지출은 정부 재정 외로 운용되어 보건·복지재정통계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음.<sup>4)</sup>
    - 박인화(2010)의 방법론을 따른 조경엽(2012)에서는 “2010년도 건강보험지출 34.9조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.9조원을 더할 경우 보건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실질 지출비중은 15%로 OECD 평균 14%를 상회하고 있다”는 것을 지적함.<sup>5)</sup>
  - 따라서 공적연금 급여지출 차이와 건강보험지출 관련 통계를 감안한다면, OECD 국가 GDP 대비 복지재정 평균비중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비중 격차는 10%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음.
-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성숙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재정 비중은 자연적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.
-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(Social Expenditure)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  -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부양비는 2030년에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.

<그림 1> OECD 주요국의 노인부양비 예측

(단위: %)



자료: OECD (2011), Pensions at a Glance, OECD Publishing, Paris

주: 노인부양비 = (65세이상 인구)/(20-64세인구)

4) 박인화(2010), 『복지재정운용실태와 정책과제』, 국회예산정책처.

5) 조경엽(2012), “지속가능한 복지정책”, 『차기정부정책과제』, 한국경제연구원 출간예정.